

서평 - 『개화당의 기원과 비밀외교』

정용화 (코리안드림네트워크)

1. 총평

□ 이 책은 한국근대 정치외교사와 사상사에 대한 새로운 해석으로 기존의 담론을 허무는 도전적인 역작이다. 조선후기 실학에서 개화사상으로 이어지는 사상적 발전과정과 개화세력을 중심으로 한 정치외교사에 정면으로 이의를 제기하기 때문이다. 저자의 지적대로 개화당의 사상적 기원을 북학파의 종장 연암 박지원의 손자인 박규수에 가서 구한 기존의 통설은, 일본인의 입장에서 자발적 부역자라고도 할 수 있는 개화당에게 역사적 정통성을 부여하고자 했던 ‘식민사학’과 1960년대 이후 조선사회의 주체적·내재적 근대화 가능성을 입증하는 것을 소명으로 삼았던 ‘민족사학’의 의도치 않은 합작으로 만들어진 신화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활발한 학제적 토론이 필요하다.

□ 이 책은 조선은 물론 중국, 일본, 영국, 미국, 프랑스의 외교문서와 미간문서 등 1차 사료에 주로 의거해 개화당의 기원과 활동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한국외교사의 틈새를 메우고 새로운 사실을 밝혀냄으로써 그간의 의문점을 상당히 해소해주었다. 당시의 군권-신권의 권력관계와 개화세력의 인간관계, 고종의 정치행태, 태극기의 고안과정, 이동인의 자세한 행적, 조약개정 과정, 김옥균의 차관 외교와 3차 방일 시 ‘동남제도개혁사 겸 포경사’ 직함의 의미, 후쿠자와 유키치 및 고토 쇼지로와의 관계와 <갑신일록> 저술 경위, 국서위조 경위, 대원군의 정치적 의미와 위상 등은 필자가 밑줄그어가며 읽은 대목들이다.

2. 외교와 내정

□ 외교는 내정의 연장이다! 내정을 모르고 외교를 알 수 없고, 외교를 모르고 내정을 온전히 평가할 수 없다. 내정의 핵심은 권력경쟁이다. 집권자는 권력의 획득과 유지가 일차적 관심이다. 권력을 상실하면 자신의 안전은 물론 자신의 이상을 더 이상 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외교는 내정의 중요한 수단이다. 역으로 외교는 내정을 제약하는 환경이다. 약소국일수록 그 환경의 부담은 크다. 정치는 국내정치세력과 국제정치세력 사이에서 춤을 잘 추지 않으면 언제든지 추락할 수 있다.

□ 고종의 군권 강화 통치술과 균세외교는 궁합이 잘 맞았지만 자체역량 - 확실한 권력기반 또는 확실한 후견국 - 을 키우지 못해 안팎으로 시달리다 국망을 초래했다. 박규수, 김윤식, 김홍집, 어윤중 조영하 등 집권세력은 신권강화 속에 개혁을 추진했으나 후견세력인 청국의 퇴진과 함께 시들어갔고, 김옥균, 서광범, 홍영식 등 주변세

력은 일본을 등에 업고 권력을 장악하려 했으나 일본의 소극적인 태도로 몰락했다. 일본으로 세력교체, 미국으로 세력교체에 편승한 사람들은 부귀영화가 쉬웠고, 이에 거역하는 사람들은 고초를 겪어야 했다. 권력자든 민간인이든. 이 책은 외교와 내정의 관계를 상기시켜준다.

3. 국제체제와 신분질서

□ 이 책의 핵심 주제는 개화당의 핵심 가치가 평등사회 구현이며, 개화당의 주체가 중인이라는 것이다. 조선 후기 기술직으로서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높은 수준의 지식과 교양을 갖춘 중인들이 양반특권구조에 의해 출세와 활동이 제한되어 사회적 불만 세력이 되었고, 이들이 급진적 사회변혁을 위해 외세를 끌어들이려 했다는 것이다. 그것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문명개화’의 편에 서게 했다는 것이다.

□ 기존의 국제체제, 즉 위계적 조공체제를 부정하고 새로운 국제체제, 즉 평등한 만국공법체제 도입을 적극 주도한 개화당의 기원이 신분질서를 혁파하려는 중인계급에서 나왔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조선의 조공체제는 봉건적 신분질서에 조응하는 국제체제였다. (졸고, “조선의 조공체제 인식과 활용”, 한국정치외교사논총 27-2, 2006) 조공체제는 중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질서였지만, 중국의 일방적인 강제나 시혜에 의해서가 아니라 주변국들이 각자의 이해관계 - 문명공동체, 국가안보, 정권안보 - 에 따라 참여한 가운데 공동의 노력으로 유지되었다. (세종이 가장 열심이였다) 조공체제의 붕괴는 외부적으로 서양 조약체제의 도전에 의해서라기보다 동아시아 내에서 중국의 중심성을 일찍이 부정하고 문명의 중심을 근대서구에서 찾은 일본에 의해 추진되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 동아시아 내에서 조공체제의 진정한 붕괴는 국내의 봉건적 신분질서를 해소하려는 국민국가 형성 노력과 함께 시작되었다. 그러므로 동아시아 조공체제가 붕괴되고, 그 과정에서 조선이 일본제국주의에 의해 멸망된 것에 분하고 슬퍼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스스로 우리 사회의 정치, 경제 구조를 먼저 봉건적 테두리에서 벗어나게 하지 못한 것을 슬퍼할 일이다! (졸고)

4. <조선책략> 과 「영남만인소」(1881)

□ 저자는 “<조선책략>의 방아론은 기본적으로는 청의 국제정치적 전략을 반영하는 것이었지만, 김홍집과 조선조정 입장에선 연미의 의도를 은폐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하면서, ‘영남만인소’에서 제기한 방아론의 허구성에 동조하고 있다. 「영남만인소」에서는 “아직 가지지도 않은 러시아의 마음을 깨우고,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미국의 일을 만들어서 도적과 오랑캐를 불러들이려는 것입니까?”라고 비판하고 있다.

□ 하지만 당시 국제정세는 영국과 러시아의 그레이트게임의 큰 틀 속에서 조선이 개항되고, 조선에서 각국이 각축을 벌이다가 영일동맹(1902), 러일전쟁(1905)에 의해 식민지로 전락한 과정에 있었다는 것을 알고보면, 조선은 참으로 정세에 어두웠고, 국내 권력게임에 매몰되어 있었다! 최근 알게 된 자료에 따르면, 1861년 러시아의 쓰시마 정박 및 차용 요구로 러시아 위협을 실감한 일본은 영국의 개입을 요청해 러시아 철수를 이끌어냄으로써 영일동맹이 형성되는 기초를 형성했으며, 조선이 러시아의 영향권에 들어가면 일본 열도 전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인식한 일본은 조선진출이 동아시아에서 새로운 세력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안보를 위해서도 절실했다. 1869년 10월 29일 일본 외무성이 태정관에게 보낸 ‘조선국일건사서’라는 조선과의 수교에 관한 정책문건에서 “일본은 조선을 기왕에 정복한 경우도 있다. 현재 러시아를 비롯하여 열강이 조선에 진출하려 하는데 이를 방지하는 것은 오로지 일본만이 할 수 있다”고 했다. 영국 외무부의 사서 Edward Hertslett이 1882년 조영수교 뒤 작성한 「조선에 관한 각서」를 보면, 1854년 이래 러시아가 조선에 개입하지 않는 한 영국도 조선문제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것이 1882년 조영수호조약 때까지의 기본 노선이었고, 1870년대 이후부터 러시아에 대비한 거문도 점령계획을 세웠다. (1885년 실지 거문도 점령) 러시아도 1866년과 1871년 프랑스와 미국이 조선을 침략하면서 러시아에 공동행동을 제의했으나 ‘기다리는 정책’으로 거절했다. 영국과 러시아의 그레이트게임은 어차피 겪어야 할 서방세계와의 만남을 늦췄고, 오히려 일본에게 기회를 줬으며, 일본의 조선 개항 목적 중 하나도 러시아 영향에 대한 선제 방어였다.(정의길, 『지정학의 포로들』 참조)

5. 정치적 인간 유형

- 김옥균형 - 혁명형
- 유길준형 - 자주형
- 김윤식형 - 보수형
- 최익현형 - 수구형
- 윤웅렬, 윤치호형 - 대세추수형

6. 의문점

(1) 음모론과 확장편향 아닌가?

- 시종일관 김옥균의 ‘교활함’과 ‘음모’로 자료를 해석하고 서술하고 있어 지난친감이 있다. 지식인관료로서 나라의 ‘독립’과 ‘문명’개화를 위한 진정성은 찾아보기 어렵다. 인간이 한가지 유형으로 살기는 어려우며, 혁명 또한 우연적 계기가 작용하는 법인데, 그런 내우외환시기에 13년 전부터 일관되게 준비해왔다는 것은 지나

친 감이 있다.

- 만약 혁명이 성공했다면 김옥균의 ‘음모’는 ‘치밀함’으로 ‘교활함’은 ‘영리함’으로 해석될 것인가? “성공하면 충신시오, 실패하면 역적”이라는 말이 떠오른다.

(2) ‘개화’ / ‘독립’ / ‘문명개화’ 의미 구분

- 저자는 ‘개화’와 ‘문명’을 일본의 관점(조선 침략에 유리한)에서 보고 매우 비판적인데, 당시 ‘개화’와 ‘문명’은 보편적 의미를 갖는 것 아닌가? 문제는 그 모델과 방법 일텐데, 당시로 보면 청국과 같은 동도서기론, 일본과 같은 변법개혁론(서구화론)으로 나눌 수 있다. 우리가 해방후 미국식 자유민주주의/자본주의와 소련식 인민민주주의/공산주의에서 선택할수 밖에 없었던 것을 상기하면, 1880년대 당시 어떤 선택이 좋았을까?
- 외세를 끌어들이며 정권 장악을 기도하는 것은 고대부터, 근대화 과정에서도 흔한 일이다. 이승만, 김일성은 외세 간섭 없이 세워졌는가? 조선이 중국에 의존한 정권이었다면 혁명을 꿈꾸는 세력이 일본을 끌어들이려 한 것을 무리하다고 할 수 있는가? 아니면 동학처럼 민중을 기반으로 하던가.

(3) 청의 속국화 정책과 실제

- 저자는 1883년 시점에서 이홍장이 조선속국화 정책을 진지하게 검토한 증거는 찾기 어려우며, 당시 청의 속국화 정책이나 뮐렌도르프의 역할에 관한 과장된 인식은 갑신정변을 정당화하고자 했던 개화당과 일본인들에 의해 사후적으로 구성된 것이라고 주장한다.(p.229)
- 하지만, 1882년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은 조선이 중국의 속국임을 증거하는 자료였으며(“이번에 의정하는 장정은 속방을 우대하는 뜻에서 나온 것으로” “앞으로 장정을 개정할 일이 있으면 수시로 북양대신과 조선국왕이 자문을 통해 협의한 후 황제의 칙지를 통해서 시행한다”) 1882년 임오군란 이후 3000명의 청군이 조선에 주둔하였다는 것은 기왕의 ‘내치외교는 자주’라는 간접지배에서 사실상 직접지배로 전환하는 과정이었다.
- 저자는 그런데, “청이 조선에 대한 속국화 정책을 단행할 가능성을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는다”는 다케조에 일본공사의 평가를 근거로 들고 있다.

7. 현재의 함의

□ 북한의 개혁개방